동아시아에서의 국제법 역할

국립외교원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사회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발표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루 지안 중국 푸단대학 법대 교수
왕지앙유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법대 교수
반자이 히로유키 일본 와세다대학 법대 교수
심상민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교수
정리 **윤지혜**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연구원

— 왕지앙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익숙해져 있던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부상으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계 지역에의 관여 축소, 법의 지배의 쇠퇴와 파워 지상주의의 도래 등으로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중국의 국력에 근거한 법의 지배 개념의 투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아시아 각국은 번영을 위한 경제통합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보분야에서도 동아시아 각국은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제법의 역할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 루 지안 현재 동아시아에서 경제개발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핵심 현안으로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제법적으로도 중요하며, 국제법을 통한 구체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형식으로 법의 지배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는 개발 및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주권과 국제적 의무의 균형이 중요해졌다.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내는 차원에서 집단의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도 보장하는 지역적 국제법의 구성 및 적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반자이 히로유키 국제법은 주권 평등의 원칙, 무력사용의 배제, 평화적 분쟁의 해결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 외에도 국제법은 중간적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자원 이용에 대한 요구와 민족주의가 번영의 기초를 저해하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기는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제법에서 법의 지배가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에서 유래하는 적절한 조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가들의 공통적인 지혜와 철학을 밝혀 내는 것이다. 그러할 때 북핵문제 등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동아시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안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홍성필 동아시아 국가들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 내에는 지역적 협력 기구가 부재하다. 유럽의 경우 두 차례의 끔찍한 전쟁을 경험한 후에야 집단안보와 가치체계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이 가능했다. 동아시아 문제 해결에 관하여 일방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한 최선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만의 상시적인 대화 채널, 기구가 필요하며, 단순히 각국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확립해야 한다. 기본적인 가치 공유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국가 간 협력이 동아시아의 통합과 번영을 위한 바른 길이다.

— 심상민 동아시아에서 지역적 협력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국가들이 현 상황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여 협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거대담론으로서의 협력기구 구성을 지향하기보다는 기후변화협상의 결과로 만들어진 파리협정 체제를 본떠 각국이 자유로이 기여할 내용을 정하고, 다른 국가들은 그러한 기여방안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구조를 참고할 만하다. 각국별로 달성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소규모 공동선의 추구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협력의 심도와 범위를 넓혀 가는 방식이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행동규범으로 정착된다면,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이것이 광의의 법의 지배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Keywords
동아시아, 법의 지배, 지역적 협력 기구, 사회적 통합, 경제발전, 번영, 주권평등, 무력사용의 배제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지역국가들의 상이한 정책목표 및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석한 학자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법의 지배 및 국제법의 역할에 긍정적이었음. 기존의 국가이익에 구애되는 좁은 이해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 사고 및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교환을 통한 의사소통의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롭고 지속적인 대화 채널의 구상 등은 현 북핵위기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재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제재와 대화 병행 노선을 구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러한 방식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함.